

서울 K초교 공사 자재 납품 비리 의혹 “공사 끝났는데, 대금 못 받아”

**법원에 대금 지급명령 신청
비전문가가 관급자재 선정,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 지적**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교실 바닥 교체 공사를 하면서 특정 업체 자재를 쓰도록 했으나, 이게 무산되자 무더기 하자를 제기하면서 공사를 지연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전문가가 학교 관급자재를 선정하거나, 허술한 학교 공사 관리감독 체계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K초등학교는 지난 8월 여름 방학 중 학교 교실 바닥 교체 공사를 발주해 공사를 마무리했으나 하청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대구 소재 H업체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원청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한 상태다.

H업체 대표 L모 씨는 “최초 설계도면에 적용됐던 S업체의 이중 바닥 마루틀 시스템은 현장 상황에 맞지 않아 결국 학교 측과의 협의를 통해 다른 자재로 교체했다”면서 “이후 학교 측이 터무니없는 하자(87곳)를 문제 삼으면서 공사를 지연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L씨는 최초 설계에 반영된 자재를 제공한 S업체는 원청업체 측에 과도한 견적금액을 제시해 학교측과 큰 다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S업체는 자사 제품이 설계에 반영됐다는 점을 들어 과도한 금액을 청구했고, 원청업체는 마진이 남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학교측은 해당 자재를 사용할 것을 압박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사에서 사용된 교실 바닥재 또한 조달청 우수제품과 비교해 성능은 떨어지고, 가격도 비싼 다른 업체 바닥재가 사용됐다. 바닥재는 학교측이 제시한 3개의 자재 비교표를 놓고 관급자재 선정위원회 7명이 투표로 선정했다.

위원회에서 채택된 고강도탄성 마루판(규격: 8TX94WX800 L)은 비교표에 있는 조달청 등록 신기술 개발 우수 제품인 복합마루판(15TX140WX1200 L)과 비교해 내구성과 안정성, 저소음성, 통풍성 등에서 현저하게 떨어졌지만 단가는 5만3000원으로 복합마루판(4만5100원)보다 비싸다. ‘운동장 환경개선 및 본관 교실 바닥교체 공사’ 바닥재 선정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한 위원이 ‘물에 강하다고 하니 첫 번째 제품이 마음에 드는 것 같다’고 하자 다른 위원은 ‘저도 그래서 괜찮은 거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그러면 물에 강한 첫 번째 자재로 결정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위원회의 전문성 결여를 엿볼 수 있다.

특히 해당 자재를 최초 설계에 반영한 설계사무소를 해당 초등학교 관할청인 서부교육지원청이 추천해 준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기관과의 유착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서부교육지원청 시설팀 담당자는 “K초등학교 측이 설계사무소 추천을 해달라고 해 같은 시기 K초등학교 다른 공사를 맡았던 설계사무소를 추천해 줬다”면서 “특정 자재 납품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학가 소식

삼육대 ‘이경송 음악자료실’ 개관

삼육대학교 학술정보원은 원내에 ‘이경송 음악자료실’을 조성하고 7일 VR학습장에서 ‘감사예배’를 열었다고 밝혔다. 9일 밝혔다.

이경송 동문은 1956년 삼육대 전신인 삼육신학원을 졸업하고, 1966년 미국으로 건너가 이듬해부터 50년간 클래식 음반과 다큐멘터리 영상을 모아왔다. 그러다 2002년 음반 20장자를 삼



이경송 동문(왼쪽)과 부인 엄기옥 씨와 자료실에서 기증품을 둘러보고 있다. /삼육대

육대에 보낸 것을 시작으로 DVD, CD, LP, LD 등 수집 자료를 꾸준히 모교에 기증해왔다. /손현경 기자

서경대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서경대학교는 예술교육센터가 서울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함께 오는 12월까지 성북·강북지역 30개 학교를 찾아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한다.

지난달 6일 미양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서경대 예술대학의 교수진이 지도하고 재학생들이 참여해 진행 중이다. 서경대 예술교육센터와 서울시강북성북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지역연계 학교 종합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서경대학교

협약’을 체결한 이후 2회째 이번 음악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엔 총 24개 학교에서 30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음악회에 참가해 공연을 즐겼다. /한용수 기자

법원, 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檢 ‘강력 반발’

**서면심사 통해 영장발부 후 기각
운동학원 관련 검찰 수사 차질**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운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을 풀 단서였던 조 장관 동생 조모씨(52)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차질도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새벽 2시반께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한 사학재단 운동학원의 사무국장 역할을 해 온 조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학교 측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운동학원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 조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와 조모씨에게는 모두 구속 영장이 발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운동학원의 '위장 소송'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됐다. 조씨는 아울러 이같은 의혹들과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법원은 전날 오전 10시30분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조씨가 허리 수술을 이유로 7일 재판부에 일정 연기를 요청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이에 검찰은 조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하면서 이날 오후 중에는 영장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조씨 측이 법원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해 법원은 서면심사를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 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운동학원 관련 검찰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법원이 “주요 범죄의 성부에 다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점에서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내지 못할 정도로 부실하거나 증거가 부족하

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날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3번째 불러 조사한 검찰이 조 장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조씨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될 경우 예상되는 후폭풍을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 핵심혐의를 인정하고 영장 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중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현경 기자 son89@

“놀이동산 등 유원시설, 장애인 차별없이 이용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 유원시설 이용 차별 의견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 차별에 대한 의견서’를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인권위원회는 2018년부터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 차별에 관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월 14일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롯데월드, 서울랜드, 에버랜드 등 유원시설 담당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및 시각, 뇌병변 등 각 장애인들과 함께 동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개최

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의 입장 공유와 이해에도 불구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쟁점에 관해 해소되지 않은 점들이 있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간담회의 내용, 관련 자료와 법률 검토 등을 종합해 의견서를 작성했고, 동의견서에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서울지방변협은 먼저 ‘신체 건강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문구 등 부적절하거나 차별적인 문구를 개선(필요한 경우 ‘동반자’ 정도의 호칭으로 정정 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이 유원시설에 입장할 경우 비장애인 동반을 요구하는 방

침을 폐지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동반해야만 이용할 수 있거나 탑승 자체를 금지하는 서비스나 놀이시설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모든 장애인이 모든 놀이기구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나 편의를 연구·확충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 세 가지 제안사항을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및 각 유원시설에서 받아들이고 개선해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여가 및 문화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유원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동 사건과 관련된 진정사건 검토 시 동의견서를 참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손현경 기자

경희대 사회과학 연구지원사업 대형단계 선정

경희대학교는 스마트관광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 대형 단계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관광이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VR·AR)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관광객이 여행지에서 최상의 경험을 하도록 지원하는 관광방식을 말한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숙박, 교통, 관광지 등을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관광산업과 트렌드를 혁명적인 수준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사업에 선정된 스마트관광연구소는 향후 4년 간 ‘스마트관광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과 확산’을 주제로 스마트관광과 스마트관광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구철모 부소장(왼쪽), 경희대학교 스마트관광연구소 정남호 소장. /경희대학교